

박근혜 유산 일소 위해 거리·일터· 캠퍼스에서 싸우자

박근혜
파면과
이후 전망

3, 6~7면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하라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화로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5면

3·25 공무원노조 총력 투쟁대회 4면
공공운수노조의 임금 양보 제안 9면
노동시간 단축 논란 10면

프랑스 대선
파시스트 르펜의
위협

8면

유럽
인종차별 반대
운동

2면

광고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30일

8면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김종환

유엔(UN)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아 지배자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면서 이주민과 난민 때문이라는, 오랜 거짓말을 되풀이해 왔다. 서방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본래 무슬림은 폭력적이라는 낭설을 퍼뜨려 왔고, 개입 실패로 중동이 난장판이 되자,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고 더더욱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곳곳에서 인종차별적 포퓰리스트 세력 또는 파시스트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기성 정치권이 방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동시에 더 많은 나라에서 그런 추악한 세력들이 부상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각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제안으로 3월 18~19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3월 19일 보신각에서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으로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민 2백여 명이 참가했는데, 근래 열린 이주민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이 연단에서 발언하며 인종과 피부색을 넘는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낮은 난민 인정률(5퍼센트)도 규탄 대상이었다.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한국어와 영어 팻말을 들고 약 30명 정도 참가했는데, 한국인 대열로는 가장 큰 부분을



한국의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이끈 이주노조 활동가들.

이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 성소수자 합창단 지보이스도 함께 했다.

이주 쟁점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인종차별 반대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고 외쳤다. 종로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관심 있게 행진을 지켜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먹을 높이 들며 연대를 보였다. 곳곳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남긴 긍정적 영향이 물씬 느껴졌고 이주민들은 크게 기호를 외치고 합성을 지르며 해방감을 만끽했다.

프랑스

르펜 돌풍 속 희망을 확인한 1만 행진

유럽의 핵심 강대국인 프랑스는 4~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의 후보 마린 르펜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관련 기사 8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공공장소에서 무슬림의 하잡 착용 금지를 가장 먼저 제도화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끔찍한 나라다.

오랫동안 낮은 경제 성장이 지속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많은 경우 흑인이나 아랍계)들이 많아지자, 황당하게도 전통적인 보수 정당과 사회당은 그들이 종교 때문에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탓이라고 공격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좌파들이 “세속주의”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인종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본지 142호, ‘세속주의란 무엇인가?’(이언 버철)]

그런 점에서 3월 19일 파리에서 열린 “정의와 자긍심을 위한 행진”에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 인종차별 반대 단체, 이주민 공동체가 나란히 참가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지난해 여름 노동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빈민가 청년들이 함께한 것과, 지난달 프랑스 경찰이 흑인 빈민청년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노동조합과 좌파가 힘을 보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빈민 청년과 노동조합은 모두 프랑스 정부의 탄압에 시달려 왔다. 이번 연대 행동은 이 둘 사이의 오랜 서먹함을 끝낼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파시스트를 막을 진정한 잠재력은 정치인들 사이의 선거공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층의 연대와 단결에서 나온다.



3월 19일 파리에서 열린 “정의와 자긍심을 위한 행진”.

그리스

유럽연합의 난민 통제에 맞선 단결

시리아 전쟁 등으로 유럽을 찾는 난민이 지난 몇 년간 부쩍 늘었는데 그리스는 그 길목에 있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평범한 그리스 노동자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아까워하지만, 난민 유입을 막는 데 쓰는 비용은 그리스에 적극 지원한다.

최근에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까지 터키로 송환하도록 했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이끄는 정부는 수치스럽게

도 이런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분개해 3월 18일 아테네에서는 유럽연합 사무실을 향해 1만 5천 명이 행진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노동조합과 학생뿐 아니라 난민들도 비중있게 참가했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도 1천5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많은 난민들의 발이 묶여있는 레스보스 섬에서도 2천 명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유럽연합은 레스보스 섬에 있는 난민들이 그리스 본토로

가는 것도 막고 있는데, 시위대는 유럽연합이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악천후에도 각각 수천 명씩 모여서 인종차별 반대를 외쳤다. 두 나라 모두 최근에 파시스트 후보나 인종차별적 극우 정당이 선거 승리를 노린 바 있다. 이밖에 폴란드, 스페인 등지에서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수백 명 규모의 행진이 있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된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김문성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공식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 후 취임까지만 두 달 넘게 걸리는 평상시 정권 교체 과정과 달라 공식 정치에서도 급박한 면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정국이 지배적이진 않다. 대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본인의 조사와 구속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다.

3월 21일 오전 드디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나온 박근혜는 ‘송구하고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짜증도 묻어났지만, 이제는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의식해 검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기소 내용과 구속 여부 등이 판가를 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죽은 권력에 냉정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박근혜 구속이 보수 결집이라는 역풍을 불러올까 봐 걱정하니 그 점도 신경 써야 한다. 1차 목표를 이룬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도 신경 써야 한다. 이를 무시했다간, 차기 정권에서 개혁 대상 취급 받으면서 한동안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오히려 탄핵 찬성 여론이 커졌고, 박근혜 엄격 수사, 구속

등에 대한 찬성도 좀 더 늘었다. 박근혜 지지층에서조차 늘었다. 현재 판결로 국가기관(사법부)이 공식적으로 박근혜를 부패한 통치자로 규정하고 파면까지 한 것이 주는 효과일 것이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버티고,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지지세를 과시하고 현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폐 청산

따라서 박근혜 본인의 검찰 조사, 구속 여부, 재판 진행과 유죄 판결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의혹과 우익적 블랙리스트 통치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추가로 사실들이 밝혀져야 한다. 사람들은 뇌물죄 입증과 재벌 총수 구속도 바란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적폐 청산 투쟁과 연계된 쟁점일 것이다.

특히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며 공작 정치를 편 작태는 이미 확인된 사실만 봐도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경찰, 전경련 등이 얹힌 커넥션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노동 개악, 교육 개악 등을 위한 사전 땅고르기 작업이자 돌파 수단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통치의 부패상을 단죄하는 일은 박근혜 정권의 진짜 목적, 즉 고통전가와 친체국주의 정책들에 맞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이 해냈다 파면은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의 유산 청산 투쟁을 벌여야 한다. 3월 11일 20차 범국민행동.

싸워야 할 박근혜의 유산이 남아 있다

〈한겨레〉가 3월 20일에 공개한 여론 조사에서 57.3퍼센트가 차기 정부는 진보개혁 성향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열에 여섯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셈이다. 거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새누리당 계승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약화됐으며,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율은 올랐다.

퇴진 운동의 결과로 바뀐 세력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반기문에 이어 황교안마저 불출마하게 된 것은 이런 세력관계 탓이 크다. 돈과 세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조차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 결집력이 생기기 어렵다.

그런데 퇴진 운동 덕분에 차기 여당으로 유력해진 민주당은 오히려 우를 띠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민주당 등 자본주의적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집권해도 새누리당(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를 일부 계승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대중의 개혁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데 열중한다.

문재인은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안희정은 대연정 추진을 강조한다. 민주당으로 정권만 바뀌는 데서 그치지 않

고 더 깊고 폭넓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대선이 별로 신나는 일이 아닌 이유다. 덕분에 정의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듯하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석 달 간 지켜 온 황교안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난 박근혜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 사표를 모두 반려한 것은 형사재판에서도 박근혜 일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이용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노동 개악, 철도노조 탄압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

황교안은 지배계급의 두려움과 복수심을 등에 업고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 대중의 높아진 자신감에 상처를 내려고 공리할 것이다. 황교안은 얼마 전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광주 ‘6.15 학교’ 활동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의도를 파탄 내고 지금의 성취를 더 전진시키려면 여전히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고통전가 공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지금의 유리한 세력균형을 이용해 노동과 공공, 교육 등 분야에서 펼쳐진 개악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 위주가 아니라 대중 투쟁을 강화할 정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한 이 유를 이렇게 열거했다.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 …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수렴해 정치체제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탄핵 사유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반면, 정권 퇴진 운동의 사회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노동계급 대중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의 바탕에는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계급적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의 이런 판결 때문에 박근혜 퇴진 운동은 계급적으로는 성과가 없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만 강화된 것일까?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돼서 그저 좋은 결과인 것일까?

일단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실질적 불평등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확보하면서 일부 정치·사회적 기본

권도 확보한 체제이다.

그래서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화’는 양면성을 띠기 마련이다. 따라서 형식적 결과보다는 세력균형과 이를 반영하는 대중의 의식과 조직이 더 중요하다.

지배계급은 분기탱천한 수백만 명의 즉각 퇴진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기존 헌정 체제(헌법) 안에서의 ‘탄핵’ 절차로 그 분노를 수렴하려 했다. 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신뢰를 기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그렇게 만든 힘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서 나왔다는 점을 봐야 한다. 노동계급 안에서는 퇴진 운동의 효과로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조직화도 진전할 것이다. 탄핵 이후 정당 지지도 조사에도 이런 조짐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활력

길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고통전가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도 모여서 투쟁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대중의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활력을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명적 정치와 전략이 중요하

다. 그 정치는 대의제 의회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정치와 다르다. 가령 최장집 교수 등은 의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진단하고, 헌법상 절차로 해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대중의 활력이 의회 정당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변화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처방이다.

국가의 문제도 봐야 한다. 20세기 말 유럽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개혁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나같이 배신으로 귀결됐다. 몇 번 좌우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주류 정치의 배신이 투표표안으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혁주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데, 그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 매여 있다. 장기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정당들도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해야 한다는 압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힘은 결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자본주의의 이윤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다. 대중 파업과 시위 둘 다 필요하다. 의회적 개혁주의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할 때조차도 독립적인 대중 투쟁을 중심에 뒀야 하는 이유다.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무됐는데, 공무원들도 연금 개악과 성과급 확대 등 줄곧 공격에 시달려 오다 자신감이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공무원노조가 이 시기를 잘 이용해 투쟁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가 쟁취할 요구들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과 공무원에 성과·퇴출제 공격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성과·퇴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관리자 눈치를 더 봐야 하고 동료간 경쟁을 강요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도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노동 기본권

노동 기본권 쟁취도 중요한 요구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무려 6차례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공무원노조는 지금껏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 중에서도 유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노조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초창기부터 노조 활동에 앞장선 간



노동자들이 투쟁의 기지개를 켜는가? 지난해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부들을 온갖 탄압으로 해직시켜 놓고 이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설립신고조차 거부하고 있다. 해직자 1백30여 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해야 하고 설립신고뿐 아니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지난 2010~2011년에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사 1천9백20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정도로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로서 공무원·교사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대선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3권 보장, 정치 기본권 보장, 성과주의 폐지 등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가장 적극 수용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18일 개최된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도 “집권 후 즉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공무원 철밥통” 편드는 野후보들”이라며 비난했다. 문재인·이재명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배 운운하며 판지를 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정부가 해직자의 공무원·교직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

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에도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수용에 미온적인 것에 비하면, 문재인, 이재명 등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고 우파의 반발 등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대신 1.5권만 부여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던 것을 봐도 노동3권을 쟁취하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2015년 사상 최대의 공무원 연금 개악으로 이끈 ‘사회적 대타협’을 민주당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와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합의를 정부가 폐기한 것이 유감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만 받아낸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연금개악처럼 강요된 양보를 합의된 양보라는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쉽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자신감으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전 공기업 6곳의 주식상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 하반기에 나머지 1곳을 상장하고, 중부·서부·남부 발전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20년까지 상장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전체 지분의 20~30퍼센트만 상장하고, 상장 이후에도 정부가 해당 공기업의 지분을 최소 51퍼센트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간자본의 목소리가 커지면 요금 인상 압박은 커질 것이다.

이미 상장된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 경제 위기와 고유가 시대에 서민경제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전기요금과 가스요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대중의 생활 조건을 하락시킨다.

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정부의 동결 정책으로 발생한 가스요금 미수금과 이자를 2013년부터 도매가스요금에 추가 산정해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결국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노후화된 석탄 발전 설비에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이 상장되면 주주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

KT와 포스코

결국 정부의 주식상장 계획은 우회적 민영화 계획이다. KT와 포스코의 사례처럼 향후 민간자본의 지분이 확대되면서 완전한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공산도 크다. 정부는 1993년 한국통신 지분의 10퍼센트를 매각하고

서 지속적으로 정부 지분을 줄였고, 1997년 IMF 사태 때 경제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한국통신을 완전 민영화했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지분을 51퍼센트 이상 소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민간자본의 지분 확대를 통한 완전 민영화가 최종 목표임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는 경영투명성 강화,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 신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상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전은 2015년 당기순이익이 10조 원이 넘었다. 향후 여유가 지속된다면 한전과 발전 공기업 6곳의 고수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 신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상장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노동조합 8곳은 주식 상장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에너지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상장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처음에 상장되는

것이 어렵지, 상장되고 나면 민영화 추진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그만큼 상장되고 나면 민영화를 막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상장을 막아 내야 한다.

이호성 한전KDN 노동자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
- ★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 (송민수, 창비)
-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의 집권기 복핵 외교사
- ★ 현대중공업 분할
- 투쟁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펔(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펔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펔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2백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 GM은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하며 오펔에 집중해 수익을 내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3년여 만에 오펔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오펔 매각으로 GM은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앞으로 미국·중국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GM은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해 왔다. 부도 위기 직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대폭 삭감했던 GM은 최근에도 미국에서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오는 5월까지 1천1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GM은 오펔 매각 전에도 독일·벨기에·폴란드의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하기도 했다.

GM이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자, 한국에서도 공장을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GM은 2009년 위기 이후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공장을 철수한 바 있다.

2016년 한국GM은 오펔을 통해 14만여 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이는 한국GM의 2016년 완성차 수출량(42만 대)의 3분의 1이 나 된다. 당분간은 오펔을 통해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겠지만, 오펔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2019년부터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했을 때도 한국GM의 완성차 수출이 20퍼센트(15만 대) 넘게 급감한 바 있다([그림2] 참조).

이 때문에 군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1천여 명이 해고됐고,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급감했다. 한국GM의 영업이익도 2014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도 3천억~4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

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도 한국GM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GM은 미국에 완성차 20만 대가량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3월 들어 한국GM 사측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또, 올해 부평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던 엔진 물량 중 24퍼센트(13만 7천 대)를 6월부터 감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동안에는 한국GM 노동자들의 반발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반대가 예상돼 GM이 한국에서 공장을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매각·합병·분할 같은 주요 구조조정 방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GM은 산업은행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산업은행은 모두 거절해 왔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거부권은 2017년 10월에 종료된다.

한편, 쌍용자동차를 ‘먹튀’한 바 있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을 인수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상하이자동차는 중국에서 GM과 함께 상하이GM(상하이자동차 51퍼센트, GM 49퍼센트)을 설립하며 협력해 온 GM의 주요 파트너이다. 최근에는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GM과 상하이GM의 중첩되는 사업부문을 통합하면서 한국GM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산업은행이 한국GM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산·부평 등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GM 공장의 폐쇄·축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더욱 높이려는 GM 본사의 전략에 따라 한국GM의 위상은 매우 흔들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GM의 유럽 철수, GM과 상하이자동차의 협력 강화 등은 한국GM의 생산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 되면 한국GM에서 공장 축소와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더러 한국GM을 국유화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세계화는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최빈국 임금 수준으로 추락하는 경주를 뜻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의 연구가 이런 관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대략 10년 전 프리먼은 “거대한 증대”라는 현상을 다룬 글을 썼다.

프리먼이 말한 “거대한 증대”는 중국, 인도,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세계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세계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현상을 의미한다.

그 국가들이 세계시장 밖에 있었다면, 2000년에 세계 노동인구는 14억 6천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프리먼은 주장했다. 그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세계 노동인구는 29억 2천만 명으로 갑절이 났다는 것이다.

“세계 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받았고, 그 결과 선진국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화됐다”고 프리먼은 결론 내렸다.

그러나 시장전략연구소 유러모니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맹렬한 성장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러모니터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중국 제조업 부문의 평균 임금은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국가의 임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증했고, 10년 간 맹렬한 성장 속에서 중국 노동자 봉급이 3배로 증가하면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임금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노동인구 전체를 놓고 봐도, 중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소득은 칠레를 제외한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모두 넘어섰고, 유로존 하위권 국가의 약 70퍼센트 수준에 도달했다.”

즉, 프리먼이 관련 글을 처음 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제조업 부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3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에서 시간당 임금은 하락했다. 포르투갈에서는 5.15파운드에서 3.68 파운드로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세 가지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중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허브가 됐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했다.

그러나 존 스미스가 그의 중요 저작 《21세기 제국주의》에서 지적했듯, ‘남반구’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을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일이 흔하다. 비용을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 기업 폭스콘이 전형적인 사례다. 폭스콘은 애플 제품

을 조립하는 중국 공장의 노동자 처우가 열악해 큰 비판을 받아 왔다.

저항

이처럼 열악한 처우에 맞선 중국 노동자들의 저항이 임금 상승에 한몫했다. 제조업 부문뿐 아니라, 전체 부문에서 임금이 올랐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생산성이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더는 값싼 인건비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기업들은 임금을 더 주더라도 숙련 노동자들을 보유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

둘째, 중국의 발전은 브라질과 남아공 같은, ‘남반구’ 내의 비교적 발전된 경제의 제조업에 압박을 가한다. 그곳의 기업들은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중국의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임금을 억누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유럽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나타난다. 남유럽의 제조업 기업들도 점점 더 중국 등 “신흥 시장” 경제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유로존의 지배 세력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금 하향 압박이 더욱 강화된다. 만성적인 대규모 실업과 수요 부족도 포르투갈 제조업 임금 하락에 원인이 됐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 상승과 하락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해야, 서구에서든 중국에서든 ‘저들을 보라’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기업주들을 저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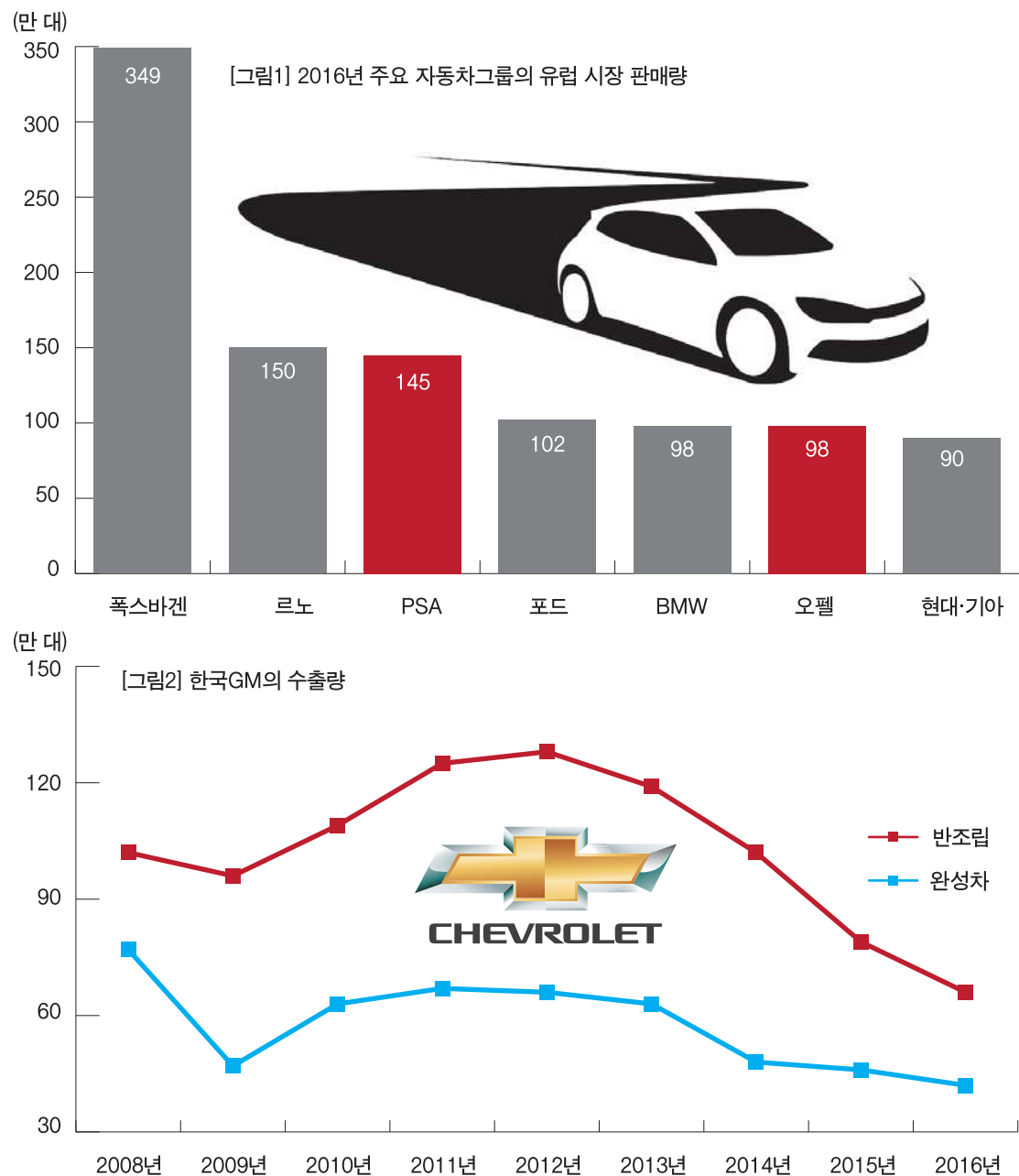
중국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간 임금을 3배 올린 것은 세계 노동계급 전체에게도 일보 전진이다. 이 성과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중국 국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압력이 없었다면 임금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곳에서 임금 삭감에 맞선 노동자 운동이 패배한 경우에도, 그 패배가 필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계의 노동자들은 함께 더 전진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545호 / 번역 최병현





조직 노동자 계급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선도자이자 견인자 구실을 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최일봉

어떤 운동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뭇 때문에(또는 뭘 위해) 싸우는 걸까?’ 하고 묻는 것이다. 가령 버스 타고 가다 멀리서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본다면 당시는 속으로 맨 먼저 그렇게 물을 것이다.

수백만 국민 대중(이하 민중)이 직접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살펴 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대답은 이렇다: 민중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세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멀리서는 봉우리만 보이는 산도 가까이 가 보면 깊은 골짜기가 보이는 법이다. 우선, 민중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 다수는 노동계급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직 노동계급 사람들보다는 조직도 있지 않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실업(미취업) 상태인 노동계급 사람들이 많았다. 노동계급 사람들이 운동 참가 면에서 가장 주요한 구성 성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운동의 **사회적 구성** 면에서만 노동계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능동성과 투쟁성 면에서도 노동계급은 (특히 초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특히, 철도 노동자 파업은 10월 말에 반박근혜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여지면서 반박근혜 운동의 원시적(시초) 축적을 나타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2백3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나는 데에 선도자 구실을

했다.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은 사실상 ‘총파업’이 아니라 제한된 부분의 파업이었던 데다 단시간에 그쳤지만, 정치적 성향으로서의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마침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노동계급은 이렇게 운동의 **견인자** 구실을 했던 것이다.

노동계급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건 민주당 · 국민의당의 자유주의자들이 정의당과 철도노조 ·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의 개혁주의자들과 아합해 철도 파업을 끝낸 일에서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 정당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박근혜를 탄핵한 게 12월 9일이고,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의 개혁주의 노조 지도자들이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 게 12월 9일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철도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파업이 더 강력해지고 확산될까



거리 시위에 참가한 민중의 다수는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

수도 있었다.

그러하여 단지 박근혜 파면(그리고 박근혜 일당의 구속)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노동자들이 다수였으면서도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 저임금 1만 원, 노동개혁 · 구조조정 중단, 전교조 · 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 권리 보장 등을 실질적 요구로 내놓지 않았다. 겨우 몇 차례 집회 연단에서 몇몇 연사들이 폭도하는 정도였다.

반박근혜 운동의 실질적 요구가 되지 못했을뿐더러 노동자들 고유의 투쟁도 벌어지지 않았다(12월 초까지 벌어진 철도 파업을 제외하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원했음에도 아직까지 박근혜 일당의 퇴진만을 얻어 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박근혜 파면에 멈추지 않고 그 정권 자체를 퇴진시킬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그 해서 필자가 박근혜 파면이라는 운동의 성취를 하찮게 평가하는 건 아니다. 필자도 박근혜 파면이 “너무 기쁘다”(노동자 연대) 신문 200호 1면 헤드라인). 그럼에도 필자는 1백 년 전쯤 미국의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이던 유진 뎀스가 한 다음 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원하지 않지만 갖고 있는 것에 투표하기보다는 차라리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에 투표하겠다.”

물론 뎀스는 투표와 관련해 이 말을 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즉, 정치 행동을 할 때 현실주의적으론만 하지 말고 본질적인

잠재력도 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었을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서로 아합해 기어코 철도 파업을 끝낸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 일이 노동자들의 힘을 자유주의자 · 개혁주의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증거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분명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심 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에 각종 지배자들이 채택한 다양한 대안들이 죄다 실패하면서 그들이 한 약속들은 불신받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파편치하게도 경제 회복을 대명명으로 회생을 강요하는 바람에 노동계급의 고통과 분노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지배자들은 분열돼 있다. 트럼프의 정책들을 둘러싸고,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등등. 한국 지배계급의 경우 조선연 구조조정으로, 또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어두워짐에 따라 내분이 격화됐다. 지난해 7월 중순경부터 우방 우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폭로가 시작됐고, 폭로는 심지어 (조선일보)도 가세한 가운데 고려에 고려를 물었다. 최순실 개입의 폭로는 그 정점이었다.

지배자들 사이의 내분으로 7월부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다: 갑을오토매 투쟁, 민주노총 총력 투쟁,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했던 9월 현대차 파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철도노조 파업 등. 철도 파업과 박근혜 퇴진 시위, 전국노동자대회,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파업의 상관관계는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노동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시너지 효과가 소규모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룩셈부르크는 혁명적 또는 준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중 투쟁과 대중 파업에 대해 얘기했다.)

경제와 정치의 위기가 심각한 이 같은 시기에 결집된 것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혁명적 리더십이라는 요인이다.

결집, 즉 실종된 연결 고리

혁명적 리더십보다는, 노동자들이 주도적이면 운동이 민중적 또는 대중적이 되지 못한다고 사하는 온건한 리더십이 현실에선 훨씬 우세하다. 그런 리더십은 노동계급이 정치 행동을 할 때엔 다른 민중과 보조를 맞추며,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개개 시민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상근간부들 가운데는 조합원들이 반박근혜 집회에서 (가령 자유 발언 등등) 능동적으로 정치 행동을 하기보다 ‘시민’에게 기회를 주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안에서 시민단체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연사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줄곧 불평해 온 것에 불필요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노동계급을 민중 속으로 용해시켜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능동성과 투쟁성, 특히 정치적 지도력(헤게모니)이 강력해야 하층 중간계급 사람들이 운동을 지지하면서 민중의 힘도 강화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이 강해야 민중의 힘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역이 아니다.

민중의 힘이 강해야 노동자의 힘도 강화된다는 **민중주의적** 사고는 계급투쟁의 동역학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는 중국 혁명, 쿠바 혁명, 베트남 혁명 등의 사례처럼 농민 운동(쿠바의 경우 빈민 운동)이 혁명적으로 일어났던 곳에서조차 노동자 운동은 취약하고 수동적이었던 역사적 사례로 반증된다.

물론 대학생들의 대규모 투쟁이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는 일은 종종 있다. 가령 1995년 11월 대학생들의 전두환 · 노태우 구속 시위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생 대규모 집회가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노동법 개악 철회 파업에 자극제가 됐다.

2010년 11월 영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대규모 시위가 공공부문 파업을 자극한 것도 또 다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확히 백 년 전인 1917년 3월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2월 혁명은 식료품 배급이 적은 것에 항의한 여성 시위와 노동자 파업의 직접적 결과였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여성들과 그 노동자들을 잇는 불세비키 평당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이에 관해서는 <노동자 연대> 신문 제199호에 실린 기사, ‘2월혁명은 순전히 자발적이었나?’를 보라.)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먼저, 또 강력히 싸우야, 그때야 비로소 노동자들



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 조영민

박근혜를 구속하고, 그가 남긴 억압·착취·차별 강화 정책을 철폐시켜야 한다.

도 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경향이 강하다. 민중 운동이 강력하다 해도 노동계급의 운동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반면 노동자 운동이 강력하면 노동자가 아닌 민중이 자신감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지 않고, 특히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민중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들 속에서 독자적인 선동과 조직을 할 능력이 크다면 노동자 투쟁은 강력히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촛불운동은 사회화 구성 면에서 노동자들의 비중이 컸고, 따라서 단순한 반부패 민주주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계급투쟁으로 확대 · 사회화 잠재력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이 결집돼 있었기에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철도 파업 중단 사례를 다시 들이켜 보자.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중단 명령을 조합원들이 두 차례 거부한 데에는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있었다. 하지만 혁명적 좌파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다면 어땠을까?

또, 박근혜 퇴진 운동 기간 중에 아쉽게도 기아차 파업은 사실상 불발했고, 현대차 파업은 형식적인 2시간짜리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일, 즉 노동계급 속에서 독

자적인 선동과 조직을 할 혁명적 좌파의 세력이 미약했던 것이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견제라는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노동자들의 고유한 투쟁 방법이 꼭 ‘정치 총파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이윤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내는 ‘경제적’ 파업들의 동시다발이나 연쇄가 훨씬 낫다.

정치적 노동운동을 향해

노동자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신디컬리즘(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국가 권력**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래로 대 · 사회화 잠재력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이 결집돼 있었기에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철도 파업 중단 사례를 다시 들이켜 보자.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중단 명령을 조합원들이 두 차례 거부한 데에는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있었다. 하지만 혁명적 좌파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다면 어땠을까?

또, 박근혜 퇴진 운동 기간 중에 아쉽게도 기아차 파업은 사실상 불발했고, 현대차 파업은 형식적인 2시간짜리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일, 즉 노동계급 속에서 독

자적인 선동과 조직을 할 혁명적 좌파의 세력이 미약했던 것이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견제라는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노동자들의 고유한 투쟁 방법이 꼭 ‘정치 총파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이윤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내는 ‘경제적’ 파업들의 동시다발이나 연쇄가 훨씬 낫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촛불운동은 사회화 구성 면에서 노동자들의 비중이 컸고, 따라서 단순한 반부패 민주주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계급투쟁으로 확대 · 사회화 잠재력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이 결집돼 있었기에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철도 파업 중단 사례를 다시 들이켜 보자.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중단 명령을 조합원들이 두 차례 거부한 데에는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있었다. 하지만 혁명적 좌파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다면 어땠을까?

또, 박근혜 퇴진 운동 기간 중에 아쉽게도 기아차 파업은 사실상 불발했고, 현대차 파업은 형식적인 2시간짜리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일, 즉 노동계급 속에서 독

자적인 선동과 조직을 할 혁명적 좌파의 세력이 미약했던 것이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견제라는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노동자들의 고유한 투쟁 방법이 꼭 ‘정치 총파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이윤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내는 ‘경제적’ 파업들의 동시다발이나 연쇄가 훨씬 낫다.

바로 이런 일, 즉 노동계급 속에서 독

국가가 고용주들과 기업인들의 일상적이고 집중된 지도부이다.

노동조합 운동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가질 수 없다. 노동조합 운동의 목표는 노동계급의 해방이 아니다. 노동조합 운동은 착취 조건을 개선하거나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노동계급의 해방, 자력해방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해방과 조건 개선,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해방을 확고하게 지향해야 이따금 조건 개선이라도 얻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경제 불황이 오래 끄는 시기에는 사용자들과 정부가 좀체 양보하지 않는 데다 그나마 그동안 양보했던 것마저 도로 회수해 가려 하기 때문이다.

맺으며

박근혜가 파면되자 박근혜 구속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비록 법률적 수준이지만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보통 사람들(민중)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민중의 박탈감이 커져 그들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지배자들 자신이 법치를 우습게 여기면, 민주적 권리로 침해를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나 박근혜(그리고 이재용 외에도 뇌물을 제공한 다른 재벌 총수들) 구속이 능사인 양 그 운동에 전념하는 것은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의 유산 가운데 특히 ‘노동개혁’이나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의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계급과 학생에 대한 억압과 착취, 차별 강화를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차지하더라도, 경제 위기와 지장하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그 정부는 얼마 가지 않아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할 것이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의 국가에 초래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집권당들은 없다.

사드 배치와 어쩌면 실행될지도 모를 전술핵 무기 배치 등 한국에서의 미국의 군국주의를 막을 능력과 의지를 새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심지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과 처벌 같은 민주주의적 요구도 미온적이고 극도로 제한적으로 다룰 것이다. 민주당은 참사의 한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구속 문제에 초연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에게도 비판적 투표를 하지 말고 그냥 기권하자는 제안은 아니다. 그저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적절하게 배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일터와 거리와 캠퍼스에서 노동자와 학생의 행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하고 명확한 정치적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는 혁명적 좌파의 몫이다.

※ 이 글은 필자가 얼마 전에 폐로한 참가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보정한 것이다.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도로로 광장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장소: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노동자연대** workerssolidarity.org



이호중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유가족 추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팀장



최영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권영국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박병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전 하나 줄이기》 저자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현주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

김문성 <노동자 연대> 박근혜 퇴진 운동 특별취재팀장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영익 <노동자 연대> 동아시아 담당 기자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등

시간표

4월 29일(토)

- 10:00~11:30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 _ 이호중
- 11:50~13:20 (선택 강연) **박근혜 퇴진 운동의 교훈** _ 박병우, 권영국, 최영준
-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 가는 한반도** _ 김영익
- 14:40~16:10 (선택 강연)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_ 이현주
-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계급** _ 김하영
- 16:30~18:00 **2017년 대선 이후의 전망과 촛불 세대의 과제** _ 최일봉 등

4월 30일(일)

- 10:00~11:30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 - 바로 보는 한국 현대사** _ 섭외 중
- 11:50~13:20 (선택 강연)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국가는 무엇인가?** _ 김문성
- 왜 핵발전은 나쁜 에너지인가?** _ 이유진, 장호중
- 14:40~16:10 (선택 강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_ 김인식
- 비정규직의 서러운 현실과 저항** _ 섭외 중
- 16:30~18:00 **마르크스가 촛불 세대에게 말을 건다 -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의미** _ 최일봉

※ 웹사이트(workerssolidarity.org/forum2017)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가비 이틀 30,000원 하루 17,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할인가 이틀 20,000원 하루 12,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가 이틀 10,000원 하루 6,000원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참가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017001-04-089255 / 농협 100037-56-119794 (예금주 백은진)
후원 계좌 국민은행 206001-04-033205 (예금주 백은진)

참가 신청 : workerssolidarity.org/forum2017

프랑스 대선

나치 마린 르펜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상황

김중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종차별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떤다. 그런데, 유럽의 핵심국인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 바로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은 파시스트 정당이다. 대중의 절망을 이용한 악선동으로 단지 표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정치 운동을 조직해 노동운동과 좌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타의 우익 포퓰리즘 세력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한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참상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면, 현재 프랑스 정치 상황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파시스트 정당의 대선 후보가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데에는 그동안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 온 중도계 양당의 책임이 크다. 중도우파 공화당이든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든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대중에게 고통을 강요해 왔다.

그 결과,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나타난 양상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중도계 주류 세력들이 쇠퇴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프랑스 정부를 이끈 사회당은 직격탄을 맞아 현재 지지율 4위로 밀려나 있다.

게다가 중도계 양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고통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인종차별을 부추겨 국민전선이 활개 칠 명석을 깔아 줬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이주해 온 무슬림의 후손이 많은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은 주로 무슬림 혐오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무슬림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일이다.

급기야 사회당 정부는 지난해에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도 금지

해, 공개적 장소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벗어야 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불행히도 프랑스 좌파는 '세속주의'에 대한 오해로 무슬림 차별에 맞서는 데서 무능했다.

국민전선은 무슬림 배척을 유럽연합(EU) 반대로 연결시킨다. 유럽 각국에 긴축을 강요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펴는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르펜은 유럽연합을 두고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황금 망토를 두른 파시스트"라고 공격한다!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좌파적으로 대변할 세력이 약한 것도 프랑스 좌파의 큰 약점이다.

프랑스와 세계의 지배자들은 르펜의 EU 탈퇴 계획을 우려하며 무소속의 에마뉼엘 마크롱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마크롱은 지난 해까지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산업부 장관 직을 맡아 친기업 정책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래서 주류 언론들의 예측처럼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이 승리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전선과 르펜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준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02년 대선 때는 국민전선의 후보가 18퍼센트를 득표해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르펜이 결선에서도 40퍼센트가량 득표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그만큼 국민전선의 기세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또, 르펜의 선전은 주변국의 파시스트와 우익 포퓰리즘 세력들을 고무할 것이다.

지난해 이주민 후손이 다수인 빈민 청년들이 노동계약 반대 노동자 투쟁에 함께하고, 최근에는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노동조합과 좌파가 대규모로 동원한 것을 보면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프랑스 좌파는 이런 경험을 소중한 종자돈으로 삼아 르펜을 저지할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노동계급이 정말 경계해야 할 나치 정치인 르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3월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 지원금 사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토론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했는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안전이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이 민주노조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철회돼야 하며, 민주노총 각급 조직이 그동안 다양한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 온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본지 187호,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노총 중집이 서울시지원금 사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서울본부 운영위원회 성원 과반수도 중집의 결정에 따를 것을 결의했다.

그럼에도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원금 사업을 강행했다. 심지어 이 결정에 비판적인 사무처 성원들을 민주노총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안전을 서울본부의 각급 회의에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게다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별 상관 없는 사업에 돈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무원칙한 수령 기준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지켜야 2013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 장소 앞에서 노동자들이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다. 서울시는 서울본부가 사드 반대 토론회에 지원금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런 파행이 거듭되자, 서울본부장에 대한 징계 건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회부됐고 모종의 징계가 결정된 듯하다. 현재 서울본부에 통보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지원금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대의원 3명이 우선 사무처 성원 부당 징계 철회 안전을 현장에서 발의해 상정했다. 이 안전은 금세 현장발의 정족수를 채워 과반의 지지 속에 상정됐다. 이를 보면 서울본부의 지원금 사업 강행에 비판적인 대의원들이 다수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의원들은 “2016년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사업 전반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와 재평가”를 하고,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고, 서울시지원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결의를 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보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발의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평가’ 안전에 대한 찬반토론이 끝난 뒤 표결하기 전에 정회됐고, 이때 대의원 일부가 빠져나가 정족수에서 8명이 부족해 대회가 유회됐다. 그러는 바람에 정부지원금 사업에 대한 결정은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수정안 제출자들은 정부지원금 수령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때까지 지원금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무원칙한 사용은 물론 문제이지만, 설령 지원금 사용 기준이 확립된다 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재정을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정부지원금을 쓰되, 잘 쓰자’는 주장은 ‘다른 민주노총 조직들은 받는데, 왜 우리만 못 받냐’는 물 흐리기 식 주장에도 취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가 비록 유회됐지만, 대의원 다수가 지원금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이미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원금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다시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서울본부 대의원들은 서울시지원금 사업 철회(적어도 중단)를 결정해야 한다.

최미진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공공운수노조는 대선을 겨냥해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공서비스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신규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척결, 성과·퇴출제 폐기 등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3퍼센트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비현실적인 요구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08~15년 동안 중앙 공공기관 2백15곳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율은 고작 8.5퍼센트로, 전체 정규직 고용 규모 증가율 22.4퍼센트에 턱없이 못 미친다. 반면 이 기간에 간접 고용 노동자는 40.6퍼센트가 증가했다. 정부가 저질·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선도해 온 것이다.

단적으로, 보육·간병·노인요양·장애인 보조 등 사회서비스부문의 열악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수를 메우는 데만도 1백5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과 신규 고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실질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격일제 2교대, 4조3교대 등의 교대제를 개편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요구도 타당하다. 연간 2천2백 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야간 노동을 밥 먹듯 해야 하는 교대제를 개선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매우 바라는 일이다.

자구 노력?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위해 재벌 증세를 요구한 것은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의 자구 노력”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시간 외 노동 폐지)과 교대제 개편(교대조를 늘려 휴일 확대)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재원(5천4백억 원 추산)을 일자리 확충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4만 3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경영평가제도를 내세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악화시켜 온 것에 노동자들은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며 인센티브

(추가 성과급)를 지급해 반대를 무마하려 했을 때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반납을 조직한 것은 옳았다.

또, 누구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라도 정부와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취지 자체는 좋은 의도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 개선에 나서면 “공공부문 노동조합도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부와 기업주들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물론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5년 누계 21조원의 재원으로는 주로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게다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2천만 원 임금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와 같은 모델을 치켜세우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

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선의는 더 큰 양보를 요구받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둘째, 해마다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시간외 노동 수당도 임금에서 적은 액수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제안대로라면 1인당 수백만 원의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고 경영평가도 폐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철도, 건강보험공단 등의 투사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가’, ‘임금 삭감을 노조가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경영평가 제도 폐지를 지지하지만 기존의 임금 수준도 유지되길 원할 것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이 줄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노동을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시간 단축특별법(안)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나 임금체계

변경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민주노총 2017 대선정책과 요구)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 등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달려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기시킨 못했지만, 파업을 통해 잠재력을 보여 줬고 사회적 지지도 끌어 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새 정부는 얼마 안 가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양보론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낳기보다는 공공서비스 강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민주노총의 가장 주력 노조 중 하나인 공공운수노조가 자진해 일부 임금 묶음 양보하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양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과 더불어 노동운동 내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명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원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박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주들의 편에서 주당 60시간제를, 그것도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법 개악안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연장근로에 지급하는 임금 할증률을 낮추고, 탄력근무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



악명 높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 노동자들더러 이 상황을 더 견디라는 말인가.

서 실제 법 개악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번 국회 환노위 논의에서도 정부의 개악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야는 1주일을 7일로 법에 규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조문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시행돼야 했던 것을 10년 넘게 미뤄 온 게 문제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 초과 노동에 시달렸다. 2014년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보다 더 오래 일한 노동자는 무려 3백57만 명으로 5명 중 1명 꼴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주 52시

간 상한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바른정당 소속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하태경은 3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9년부터 적용, 3백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1년부터 적용하자는 시행 유예 방안을 주장했다. 하태경은 은근슬쩍 이것이 여야 합의안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야당 안에서도 견해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조건 없이 즉각 시행하자는 안, 바로 시행하되 2~4년간의 처벌

면제(면벌) 규정을 두자는 안, 면벌 기간을 그보다 줄이자는 안 등이 나오고 있다.

조건 없이 즉각 시행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은 “현장의 고충”을 핑계로 낸다. 자명하게도 여기서 “현장”이란 기업주들을 가리키는 말로, 10년 넘게 정부 유권해석의 지원을 받아 부담을 피해 온 기업주들을 편드는 논리다. 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노동자들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고통에는 눈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등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면벌 기간을 좀 줄이는 정도로 하자거나 ‘현장 실태를 검토해 보면서 지원책을 논의하자’는 식으로 조건 없는 즉각 시행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물밑 쟁점들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물밑에서 논의되는 쟁점들, 즉 연장근무 할증률, 탄력근무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특례 업종 문제 등도 중요한 쟁점들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그동안 연장근무 할증률 인하,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한 임금 삭감을 관철하려고 애써 왔는데,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에서 민주당도 탄

력근무제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일정 기간의 면벌 규정을 두는 것에도 합의했었다.

이번 국회 논의에서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유심히 봐야 할 이유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현행법의 즉각 시행뿐 아니라 연간 1천8백시간 근무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특례 업종과 탄력근무제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한편, 국회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바른정당)·한정애(민주당) 등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동자들끼리 고충분담을 하라는 위험한 신호다.

많은 노동자들이 제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감내하면서 초과노동을 해 온 이유는 기본급이 워낙 낮은 현실 때문이다. 임금 삭감이 없어야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의 유인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강도도 높이지 말아야 인력 충원의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이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서평 |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르크스주의, 착취·소외·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이론

성지현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는 마르크스의 말에 ‘왜?’라고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오늘날이 세계의 잔혹함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12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인데, 얼마 전 콜센터의 실적 압박으로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19살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고3 실습생)는 그 한 사례일 뿐이다. 우리는 ‘공부할수록 빛지고, 일할수록 불평등해지고,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불의한 사회를 매일같이 맞닥뜨린다.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도 자라 왔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운동도 그 중 하나였는데, 이 운동의 근저에는 보수정권 아래 더 심해진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무엇이고,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전략)를 둘러싸고 언제나 논쟁이 뒤따른다. 차별에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계의 착취, 소외, 차별이 별개로 작동하고, 따라서 이에 맞선 각각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최근 한국에서 불뭉처럼 쏟아져 나온 페미니즘 서적들을 보면, 여성 차별을 착취 문제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별의 현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외 지음,
책갈피, 344쪽, 15,000원

실을 잘 폭로할지라도 대체로 차별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이 더욱 값지다. 이 책은 1부에서 인간이 자본주의에서 겪는 고통인 계급(착취)·소외·차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루는

데, 각각의 개념과 작동 원리, 그리고 관계를 설명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해방의 열쇠를 구하는 것과 같다.

2부에서는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의 구체적 현실을 다룬다. 마르크스주의는 차별을 단순하게 자본주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2부에 실린 글들은 마르크스주의야말로 각각의 차별을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들의 또 다른 장점은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에 맞선 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차별 반대 운동에서 등장한 여러 정치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 하나가 ‘억압받은 사람만이 그 억압에 맞서 잘 싸울 수 있다’는 정체성 정치인데, 이 정치는 형태를 달리해 한국의 운동에서도 꽤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런 스미스는 이 정치의 배경과 정치전략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차별에 맞서 어떤 종류의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계급·소외·차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은 무엇보다 역사적이고 유물론적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그것들이 영원불변하거나, 사람들의 의식 혹은 심리에서 비롯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해방의 전망도 현실적이다.

우선 계급의 개념을 살펴보자. 사회주의의 견해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너무 단순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계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온갖 차이를 밝히고 분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핵심 분단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다.(조셉 추나라) 저자들은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이 무엇보다 “착취 관계”라고 강조한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노동을 해야 하고, 이들의 노동 덕분에 소수는 노동의 부담에서 해방된다. 이 소수가 다수에게서 부를 뽑아 내는 방법이 바로 착취다.”(조셉 추나라)

왜 계급인가

계급이 착취 관계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계급 간 적대와 계급투쟁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즉, “착취 관계를 둘러싸고 언제나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조셉 추나라)

계급사회에서 피착취 노동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 즉 생산자들이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과정이다. 소외된 노동은 소외된 사회, 소외된 세계를 만들어 낸다.

보통 소외(의 원인)는 특정 심리 상태로 여겨지는데, 마르크스는 소외의 원인을 물질에서 찾았다. 마르크스주

의에서 소외는 인간이 자신의 삶, 자신이 사는 사회, 자신이 만든 생산물,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해 통제력을 잃은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핵 재앙, 지구온난화, 무기 경쟁, 경제 위기 등 우리의 노동 생산물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소외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고독하고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소외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쇼핑, 여행, 게임 등 온갖 개인적 취미를 찾아 매달린다. 오늘날 “자존감”과 관련한 심리학 책이 베스트셀러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 있다.

그러나 주디 쿡스는 “우리의 고통은 자율성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생산양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소외의 근절은 사회 전체의 변혁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주디 쿡스는 소외와 관련해 “특별히 논쟁적”인 분야인 정신적 활동과 예술, 노동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술에 대한 설명이 특히 흥미롭다.

‘마르크스주의 차별론’에서 예비 바칸은 착취와 소외, 차별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예비 바칸은 여성, 성소수자, 인종 차별의 역사적 기원은 다 다르지만, 차별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 지

▶ 11면으로 이어짐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전주현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 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 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는 지지받을 만하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예방책으로 제시한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는 당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한국형 클레어법’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파트너의 전과 정보 파악으로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형 클레어법’의 특징이 영국의 클레어법과는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생각은 개인이 조심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범죄 발생의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데 이용되기 쉽다**. 3월 15일 정의당이 주최한 토론회1에 참가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옳게 지적했듯이, “(클레어법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경찰은 전과 기록이 제공된 이후에도 피해가 생기면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여성이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경제적 문제나 보복 우려 등 때문에 폭력적인 애인이나 남편을 당장 떠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여성들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클레어법의 데이트폭력 예방 효과가 의심스럽다. 사실, 여성이 파트너의 폭력 전과를 조회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면 상당한 위협이 있거나 이미 폭력이 발생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여성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종 서류 심사를 거쳐 뒤늦게 제공되는 전과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정의당이 아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경우 신청 후 10~20일 후에 정보가 제공된다.)



이재현/픽사베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려야 클레어법은 실효성이 없다.

일부 언론과 경찰에서는 영국의 클레어법 시행 첫 해에 “1천3백여 건의 정보 공개로 여성을 구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3천7백60명의 신청 중 1천3백35건의 전과 공개가 이뤄졌다는 것일 뿐, 여성이 폭력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한 해 평균 0.8퍼센트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봐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폭력 범죄가 훨씬 많아, 전과 기록 조화가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데이트폭력 신고율도 가정폭력 신고율처럼 매우 낮다.

물론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경찰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신고시 출동도 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클레어법처럼 범죄 전력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다.

무능한 경찰의 책임 전가

클레어법은 잠재적 피해자가 파트너의 잠재적 폭력성을 간파하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영국에서 클레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피해 여성이 파트너의 폭력성을 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인 진보너머도 이 점을 지적했다.(이 글의 분석은 이 그룹에 많이 빚졌다.) 피해 여성은 전前 남자친구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영국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살해됐다.

지난 1월 강남에서 한 여성이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도 경찰의 대처가 결정적 문제였다. 여성은 자택에 무단 침입한 옛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친구는 연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1년 넘게 동거했던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여성은 2시간 후에 풀려난 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렇게 경찰이 여성의 안전 조처 요구를 방치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성들이 어렵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 간의 갈등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에 좌절을 겪기 일쑤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고통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도 천박하다. 지난해 2월 경찰청이 ‘데이트폭력 근절 캠페인’ 이랍시고 성차별 관념을 부추기는 행사들을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연인들이 서로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땃글을 다는 행사

를 진행했는데, 황당하게도 행사 명칭이 “경희야, 넌 오빠가 지켜줄게”였다. 젊은 남성 경찰과 미팅할 여성 참가자를 모집하는 ‘돈든한 경찰 오빠가 지켜줄게! 불타는 치맥 파티’ 같은 어이없는 행사도 벌였다.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나 여기는 경찰의 이런 캠페인은 데이트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성차별 관념만 부추길 뿐이다.

클레어법의 신상공개 방식은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처럼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그저 개인에게 돌리고 그런 개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낙인 찍기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범죄 전력자들을 낙인 찍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예방은커녕, 범죄 전력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키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만들 뿐이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무시한 채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범죄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경찰력 강화나 우파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이용되기 십상이다.

영국에서 2012년 클레어법 추진에 가장 앞장섰던 자는 보수당 정부의 테레사 메이 당시 성평등부 장관(현재 총리)였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정작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 시설 지원금은 삭감했다.

한국에서 클레어법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자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시위 진압 책임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다. 강신명은 지난해 초 전국에 데이트폭력근절TF팀을 구성해 경찰력을 증대했다. 그 시점이 박근혜가 대국민 신년사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재국주의 정책으로 노동계급에 선전포고를 한 직후였음은 의미심장하다.

클레어법을 제안한 심상정 후보가 영국 보수당이나 강신명과 같은 의도로 그 법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클레어법 제정이 낼 이런 정치적 효과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진정한 대안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여성 대상 폭력은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이 있다. 만연한 여성 차별은 다른 사회적 불의와 함께 일어나며, 여성 차별은 인간의 소외가 심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

식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는 개별 가정, 특히 가정 내 여성에게 미래의 노동 인구를 돌보는 일을 떠넘겨 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전례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어도 여전히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고, 어머니·아내로서 현신을 요구받는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는 풍토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긴다. 이것은 사람들을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몰아넣는다. 가난과 소외로 인한 좌절은 사람들의 관계들을 비틀어버리고 종종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뒤러린 일부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 불만이나 좌절을 여성에게 전가하곤 한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가난과 고된 노동, 실업과 불안한 미래는 사람들의 대인 관계 발전 능력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그래서 연인 관계가 파트너에 대한 소유와 집착으로 점철되어 병들고 망가지는 경우도 생긴다.

데이트폭력 역시 다른 폭력범죄처럼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데이트 상대를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폭력의 뿌리를 뽑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클레어법 같은 범죄 전력자에 대한 감시·낙인 강화책 대신, 경찰력이나 국방비에 낭비되는 돈이 데이트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고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또한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의 폭력에서 탈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폭력의 배경이 되는 소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난과 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성 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경쟁과 소외로 왜곡된 인간 관계를 우애와 협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착취와 억압과 폭력이 사라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1 “데이트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긴급 토론회.

▶ 10면에서 이어짐

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차별은 “모든 층위에서 계급 분열을 흐리고 같은 계급 내에서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면서 “착취라는 더 근본적인 불이익을 감춘다.” 그래서 “차별은 계급 지배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발목을 잡는다.” 마르크스주의가 차별이 계급을 가로질러 적용되더라도 차별은 노동계급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에비 바칸은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

비키가 한 구실을 통해 노동계급이 차별을 극복하는 데도 왜 혁명 정당이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런데 착취, 소외, 차별의 경험에서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착취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소외와 차별은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파편화의 압력을 가하지만, 착취의 경험은 계급을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착취는 “노동자들을 집단적 공동 행동으로 내몰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

“착취의 핵심은 … 자체 모순 때문에 해방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 즉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을 보여 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착취·소외·차별이 자본주의 계급 지배와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착취가 고통일 뿐 아니라 변혁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이 가능하고 착취·소외·차별에 맞선 투쟁은 체제 전체에 맞서는 변혁적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착취·소외·차별에 맞선 투쟁에는 항상 여러 정치가 경합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소외 때문에 이 운동들에서 보통 더 유력한 정치는 개혁주의와 정제성 정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 참용성 있게 이런 정치와 논쟁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해방, 즉 착취·소외·차별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과학이다.”(에비 바칸)

우리를 갈라 놓는 차별이 어디서 비롯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길 바란다.

이 책의 저자 중 하나인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를 변혁하려면, 우선 세계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은,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잔인한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이번에는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김승주

4월 말~5월 초로 예고됐던 인양 일정이 대폭 앞당겨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 시험 인양을 실시하고, 성공하면 곧바로 실제 인양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실패하면 다음 인양 시도는 4월 5일에 한다.

인양이 시작되면 몇 시간 만에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반나절이면 들어 올리기 작업이 끝날 것이다. 인양을 결정한 지 꼬박 2년 만이다.

선체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타는 바람이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세월호 운동의 성과기도 하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제껏 인양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해수부는 19일 오전에 인양 장비 점검 이후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가 세 시간 만에 취소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정성욱 씨, 동수 아빠). 해수부는 이번에는 인양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단

해수부는 유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인양한 선체를 수평으로 한 번, 수직으로 한 번 절단해 객실부만 떼어 내겠다고 한다.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가장 신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퇴진 운동은 세월호 운동의 부양력을 보여 줬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3백4개의 구명조끼.

속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수습자 수습 후에는 선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정리”, “처리”하겠다고 한다.

세월호 선체는 지금까지의 인양 실패 과정에서 뚫린 구멍 1백40여 개와 와이어가 끊기면서 생긴 손상 때문에 충격에 약해져 있다. 또, 선내에는 온갖 화물과 차량, 집기들이 뒤엉켜있어 절단 과정에서 화물이 쏟아지거나 객실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 그럴 경우 빠른 수색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미수습자의 시신이나 유품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핵심 증거가 파손될 수도 있다. 침몰 원인을 밝히려면 조타실, 기관실, 화물칸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 이 부위들이 파손되면 선체 내 기계 고장(조타기 고장, 프로펠러 오작동 등) 여부나 화물칸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수백 톤의 고박 상태, 화물 이동 경로가 침몰에 끼친 영향 등을 조사하기 어렵다. 화물 차량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물이다.

이미 2015년 12월 해수부는 선박의 좌우 균형을 잡아 주는 장치(스테빌라이저), 갑판 울타리(불워크), 닻(앵커) 등 세월호 특조위가 침몰 원인 조사의 주

요 증거로 거론한 부분들을 절단했다.

해수부는 “작업 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축한다. 하지만 지난 2년 가까이 일곱 차례 인양 예상 시점을 연기하고, 인양 방식을 두 번이나 변경한 해수부를 유가족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인양 후 선체 보존 대책과 조사도 중요한 문제다. 유가족들은 참사 주범인 해수부가 아닌 독립적 기구 설립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일 선체조사위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수부는 3월 2일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선체조사위가 선체 조사

방식과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4월 15일 ‘세월호 참사 3년 기억 문화제’로 모이자

그런데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자유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대폭 후퇴해 부족함이 많다.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기존 안과 비교하면, “선체 조사”는 “선체 처리”로 왜곡됐고, 수습·조사 기간과 조사 인력 모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선체 보존에 관한 내용도 “보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처리됐다.

따라서 온전한 선체 인양과 보존, 제대로 된 선체 조사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박근혜 파면 후에도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의 공범인 황교안이 여전히 정권 최고 책임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남긴 적폐 중 청산 대상 제1호다. 박근혜·황교안을 비롯해 참사 책임자들을 구속·처벌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과정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4월 15일에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전야 문화제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4월 16일에는 안산에서 기억식이 진행된다.

지난 다섯 달 간 감동적인 역사를 써온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을 들고 다시 모이자.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지금 안산에서는 ‘416안전공원’ 설립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 안산시, 전문가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416안전공원’은 제주4·3평화공원처럼 추모광장, 기념 전시실, 봉안 시설 등을 갖추고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제종길 안산 시장은 땅값 하락을 걱정하는 일부 시

민들과 재건축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자 재건축업자들을 유가족과의 협의에 참여시키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면서 3월 31일까지로 규정된 협의 기간을 6월 말로 연장하자고 유가족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416안전공원’ 건설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자 하는 안산 시민들의 토론회가 3백여 명 규모로 두 차례나 열렸다. 민주당과 가까운 이

재정 교육감의 비협조로 단원과 기억교실을 인위적인 교육지원청 공간으로 옮긴 게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이것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세월호 운동의 요구가 저절로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미 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개정, 선체조사위 특별법에서 번번이 후퇴하며 운동의 요구를 삭감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세월호 운동은 민주당

에 기대지 말고 건설돼야 한다.

부르주아 야당인 민주당은 때로 포퓰리즘적으로 운동의 압력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에 의존해 국가를 운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근본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행된 철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 등에 함께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민영화 촉진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박근혜를 만나 ‘통 큰’ 양보를 약속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려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고, 그것은 자본가들과 국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가능하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